

제42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9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토교통부 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를 13인에서 2인을 추가하여 15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희정 위원님과 한준호 위원님이 추가로 선임되고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위원님이 이견에 위원님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만큼 나오셔서 취임 인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지난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의 문제인 국토균형발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건설현장 안전 등 주요 현안들을 열심히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방문 등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법안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 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예산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시설물 정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원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6조 원으로 이 중 91%인 16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4조 원으로 이 중 93%인 37.6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7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5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84.1조 원을 조성하여 32.8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3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주택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현황부터 재무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교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GTX, 광역BRT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도 꾸준히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부담 가능한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교통망 확충과 성장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의 경제거점을 끊임 없이 연결하여 지방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교통·건설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철도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을 집중 정비하는 한편 건설현장과 공공장소 안전을 위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

끝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UAM·자율차 상용화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조 1704억 원이며 17조 5709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0.9%인 15조 964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6007억 원이며 주로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8억 원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조 4200억 원이며 이 중 37조 61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과업기간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669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2조 13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은 2억 원, 전용은 4766억 원 발생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으로 예비비 55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99억 원이며 371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08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278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미수납액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1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조 2149억 원이며 이 중에서 95.2%인 21조 1459억 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3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특회계 전출금 미집행 등으로 1조 35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용액은 191억 원, 이용액은 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8134억 원이며 14조 734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조 56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상세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조 3926억 원이며 이 중 90.2%인 13조 88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964억 원이며 동결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9105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4471억 원이며 공공요금, 배상금 등의 부족에 따라 단위사업 간 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특회계 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04억 원이며 2조 50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81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3636억 원이며 법정부담금의 납부기한 미도래 등이 주원인입니다.

불납결손은 5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2139억 원이며 이 중 97.5%인 2조 15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93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액 158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용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59억 원이며 413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42억 원이며 40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억 원이 이월되었고 175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억 원이며 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4억 원이며 14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0.5%를 징수하여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조성 실적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자동차사고 피해 분담금 등 자체수입 613억 원,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등 1032억 원, 여유자금 회수 1030억 원, 총 267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2675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589억 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에 1500억 원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58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총 84조 12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 회수 등 자체수입으로 18조 6816억 원, 청약저축, 공자기금 예탁 회수 등으로 32조 8582억 원, 국민주택채권으로 14조 1449억 원, 여유자금 회수로 18조 435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84조 1200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정책금융 지원 등에 32조 7986억 원, 공자기금 예탁 등에 12조 6263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차입금 상환에 29조 2949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9조 400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2024년 말 국토부의 재정 상태는 SOC 등 자산 724조 3999억 원, 청약저축·주택채권 등 부채 195조 8110억 원으로 순자산은 528조 5889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사업비 등 비용 24조 8159억 원, 배당·이자 등 수익 3조 7129억 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순비용이 21조 103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순자산 변동입니다.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4조 6791억 원이 증가한 528조 58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엽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충사업비를 확정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도시의 첫 입주 대학인 세종공동캠퍼스를 개교하고 광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도로 2개 노선 개통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4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2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48억 원,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14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94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78억 원을 포함한 2241억 원으로 이 중 60.5%인 1356억 원을 집행하였고 853억 원은 이월하고 32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계획 협의가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821억 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3개 완료사업 정산잔액 13억 원을 포함한 건설사업의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총자산은 2조 320억 원으로 23년보다 4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준공된 국가행정시설 등재로 인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일반유형자산이 13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6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겸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예산액 89억 원 대비 10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6억 원 중 33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 등에서 설계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원을 이월하

였으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보상비 지급 불필요 등으로 14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새만금개발청 소관 자산은 1조 5534억 원, 부채는 30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550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결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 종합연구 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80%를 선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 요청 이전에 이미 선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향후 연구과제의 선금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획재정부의 선금 지급 특례 승인 이전에 선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선금 지급 업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사업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는바 지하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예산집행상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 중 지반침하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지반을 탐사하고 공동의 존재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공동을 복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발견된 공동의 약 46%가 복구되지 않았고 미복구 공동의 상당수가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등급 또는 우선등급에 해당하므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번,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급 사업은 최근 2년 연속 실행률이 30% 미만에 그치

고 있고 2025년 초에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음에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19.3%에 불과하므로 사업 규모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번,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사업 첫해부터 계속하여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행복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하게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간 부분 2번,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미래성장센터 구축 사업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으므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불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지방비 확보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결산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결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속도로 및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담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를 벗어난 재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국립항공박물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출연금 잔액 등 잉여금의 처리를 위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과 혼잡도로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와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사업 영역을

재설정하는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도로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는 총액계상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비총액계상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 하단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중 정부보장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채권 구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상수수료를 설정하되 채권의 경과연도별 인센티브 부여 등 구상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철도 건설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을 제한하여 한정된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소위원회 자료에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대체토론 주질의 종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을 지역의 안태준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안태준 위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난 12일에 기재부에서 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하면서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방안 발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여기 보니까 35년까지 기계화된 청년 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 호,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희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서 신규 공공주택 약 1.5만 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은 메마른 사막에 물 한 컵 붓는 정도, 이 정도로 턱없이 공급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6·27 대책 이후에 주택공급정책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재부 발표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정책처럼 소개가 됐는데 이것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실례로 소개해 드리면 2035년에 공급하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것 아니냐, 재탕 아니냐, 3.5만 호 공급이 진짜 공급 맞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기재부 발표가 전체 물량은 아닐 건데, 국토부도 내부적으로 전체 물량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주택공급을 산발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게 부동산 참여자에게는 혼란과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발표 창구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인 국토부로 일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재부나 국토부 등 연관 기관을 함께 종합한 태스크포스를 따로 꾸리든가 아니면 실제로 주택정책만을 총괄하는 주택청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 셋째도 공급입니다.

장관님 취임 일성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기재부에서 발표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 발표에 일부 끼워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대해서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은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하는 선상에서 이번 기재부에서 발표된 것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끼웠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3.5만 호가 발표되면서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아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공급대책 문제는 찢끔찢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기보다는 국토부 차원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책임지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공주택의 수요를 고려한 질적 수준이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 행복주택 공급해 오고 있는데요. 미임대가 상당히 있어요, 보니까 한 5~9% 수준의 비교적 높은 비율의 미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도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재고가 18만 1938호, 6개월 이상 미임대 물량이 5154호, 손실분을 좀 추정을 해 보니까 6개월 이상 미임대로 인해서 약 57억 5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과 수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입주 희망자의 수요 충족보다는……

저 1분만 더, 이것 마무리하고 3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 충족보다는 전체적인 공급 물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체 재고 16만 9348호 중에 60㎡ 이하를 보니까 전체 99.7%가 60㎡ 이하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인용을 해 보자면 19~21평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형도 물론 좋은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자의 거주 환경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가구 구성이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교통망이나 생활편의시설, 일자리 접근성 등에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 소형공공주택 세대를 통합해서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 요즘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다 4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중형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실로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춤형으로 안 되다 보니 그 결과물이 공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의견에 기초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공공임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6·27 부동산 대책이 진통제였습니까, 치료제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부분 치료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수요 억제책으로 쓰여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썄요, 지금 진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6·27 대책 약발 다했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고개’ 하고 마용성 중심으로 한강 쪽이 오르고 강남 쪽에는 최고가를 경신한 데도 있고요. 지금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건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안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장관 처음에 임명되실 때 공급 대책이 결국은 진통제도 아니고 부분 치료제도 아니고 제대로 된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달 말에 취임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은 부족하셨지만 그래도 시장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게 이 예측이 잘 안 될 때,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참 불안정하게 반응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 대책을 언제쯤 내놓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도 좀…… 왜냐하면 공급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장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주신 6·27 대책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와 줘야만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할 때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토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국 기타 부처와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8월 안에 지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그런 조율 과정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빨리 조속하게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요. 노동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나 안전의 부재로 인한 사고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건설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얘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3개 사업장이 있는데 모두 다 멈춰 버렸어요. 그런 회사들은 고용된 인원만 6000명, 간접고용까지 2만 3000명, 가족까지 합치면 5만 명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정부가 정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103개 사업장이 다 멈춰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정부가 그 문제는 빨리 결정하고 신속하게 해 나가야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영종에 가는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다리로 이것은 사실상 재정도로로 무료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사가 멈추고 그러면 2~3개월 그냥 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교통 복지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정부 당국자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그런 법적·제도적인 정비 하는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고요. 또 하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 문제의 대책은 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당면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선에서,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인식을 확고히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걸 균형감 있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지금 국토부에 부동산 안전대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주택 복지 문제랄지 교통망 문제랄지 이런 질의를 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의 SOC 보복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만금 SOC 관련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 9월에 결국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전체 6626억 원 중에서 78%를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왔었고요. 그해 어쨌든 전라북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 총동원돼서 삭발도 하고 상경 투쟁을 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3000억 원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3000억을 복원했으면 2023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서 2023년에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수시배정 사업까지 지정해서 2023년도에도 돈을 못 썼습니다. 보니까 공항 관련 예산을 보면 실제 1800만 원 집행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 달에 수시배정 예산을 해제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뒤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24년 결산을 보면 383억 59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3억 5100만 원밖에 못 썼고 실제 3.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 하고 내년 예산안이 중요한데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만큼은 좀 실

제 그동안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들을 충분히 세워 주고 집행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120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920억만 반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해서 올리는 부분 협의하고 계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 공유하고 있고요, 저도 그때 삭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처음 예타 면제로, 기획될 때부터 너무 늦게 있어서 원래 당겨 달라는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게 아까 혼란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못 되었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별도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안과 상관없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늦어져 있는 것을 원상 복귀를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새만금 MP 변경 관련해서 여러, 기존에 윤석열부터 시작했던 MP 변경이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연히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계획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데 점검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보니까 새만금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 조성공사 공고를 올해 2025년 7월 15일 날 냈고요. 스마트 수변도시 4공구 하수처리시설 부지 조성공사도 7월 9일 날 공고를 냈어요,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물론 새만금 내측 관리수위를 마이너스 1.5m로 유지한다는 게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해수유통 확대했을 경우에, 조력발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시켜야 돼요. 아직 실제 용역이 나가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결정난 것도 있어요. 6월 17일 날 계약하고 6월 20일 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찰이 종료가 안 된 사업들은 일차 중단을 시키고 점검한 다음에 실제 MP에 맞게끔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공감하지만 한쪽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수립이다 뭐다 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필요한 내용을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영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안태준 국회 선배님의 뜻에 따라서 1분만 더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다른 위원님들 관계가 저희가 있는데, 간사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신 위원님까지랍니다.

○**신영대 위원** 그리고 소소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거복지사를 윤석열 정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총, 어떤 사업이냐면 500세대 이상인 지자체 단지 37곳 이곳에서 주거복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도 주거복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 LH가 운영하는 데는 주거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참 설계가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2694명의 세대 수가 있는데도 배치 인원 1명이고 504명이 있는 데도 1명입니다. 유일하게 2명이 있는 데가 광명 지역 3292호가 있는 데가 2입니다. 지자체는 신청이 2023, 2024년 전무했습니다. 2025년도에만 지금 부산에서 일부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 보면 실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 정책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LH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리고 LH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LH 단지 내에도 사회복지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사회복지사 만나 뵙는 대로 상담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서, 이 사업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2025년 예산도, 국토부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세워 났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좋은 건데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효성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재검토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수요 조사라든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장관님은 청문회 때 국회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좀 앞당기겠다, 조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5700만 원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25억 4200만 원 집행한 것 이외에는 매년 재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올해 예산이 1170억 5700만 원, 올해도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이건 물론 총사업비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2033년 완공 목표인 국회세종의사당을 조기에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장관님의 복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문제가 지금 제일 난제는, 실제 국회가 사업 주체거든요.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했던 건 결국 그분들 일이었던 것이지요, 국회와 기재부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추진하고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곳은 저희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사무처하고 기재부 협상 과정에 저희들이 좀 끼어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결론이 나와 그다음 일에 속도를 내는 것부터가 사실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좀 끼어서 논의에 참여해서 할 생각이구요.

일단 저희 국토부 입장은 국회의사당이든 대통령집무실이든 현재 나와 있는 주어진 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임시 사용 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곳도 준비하고 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문제에 참여해서 일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사무처 그리고 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좀 협의하시고 총사업비가 조정된 이후에도 후속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죄송한데 의장님하고 지금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 또 국회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협의를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대통령제2집무실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제2집무실도 현재 통합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여서 애초에 올 7월부터는 기본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미뤄진 겁니다.

강주엽 청장님 이게 왜 미루어졌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뜻밖으로 계엄사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탄핵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런 정치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황운하 위원 2030년 완공 목표 이거는 가능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

령집무실 2030년 완공 목표, 장관님께서 좀 더 당겨 보고 조기 건립 추진하겠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30년 완공 목표는 가능한지 또 조기 건립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설계에서 준공까지 총 55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설계하고 공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 2030년 안에 완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즉 진행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55개월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짜임새 있게 세부내역들을 조정하게 되면 저는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줄여서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건 좀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완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당겨 보기 위해서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취임한 이후에 건설산업 기업인들을 좀 만나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업인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소 건설사들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을, 첫 미팅으로 건설사들 사장님, 대표님들은 여러 분 만났는데.....

○**이연희 위원**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만나 봤는데 건설기업인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원인은 첫 번째가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그로 인한 경영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로 인해서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부분인데 이 안전사고는 실제로 OECD 상위 10개국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많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로서 저는 건설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예산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2차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정부예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역경기,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정부에서 확충해서 제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올라오면 국회에서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정부에서 안을 낼 때부터

지역경기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기업인들이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어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업이나 현장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사고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국토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이런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체적인 조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사고 및 현장 조사하는데 다만 이게 감사하듯이 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또 뭘 개선해야 될지……

○이연희 위원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제점을 찾고, 징계하기보다는 그런 포지티브한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사고조사가 진행되는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 차원에서는. 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적당히 넘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조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안전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분명하게 기업인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하고 직접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적절한 기회를 보고 있고요. 일단 사고와 관련되어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뭔가 협력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공공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주택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불용액이 5400억, 2024년도에 불용액이 4250억

정도, 약 1조 정도 됩니다.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파악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구분 양태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나눔형은 장관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싸게 해 가지고 나중에 팔면 남은 돈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주택공급 형태인데 지금 최근 3년간에 3만 7000호 정도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실제 착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지금 여러 가지, 30%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싸게 공급하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특히 지방의 경우에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혼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해서 분양까지의 과정,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를 좀 해결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분양 등이 해결이 되면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숨통이 열릴 수 있고 또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현재 8000호로 늘렸거든요. 그다음에 감정가의 83%로 매입하던 것을 90%로 올려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지방건설사들이 미분양된 것들에 대한 상당 부분 소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2만 2000호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평균 대비 1만 3000호가 높거든요. 그러면 목표는 1만 3000호를 다 매입해 주는 것을 목표로, 8000호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플러스알파도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미분양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과잉공급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HUG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금 불용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안전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조율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주공항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구성된 내용도 지금 브리핑도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취임하신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힐 수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원래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제가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대구신공항

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다 들어 볼 생각이구요. 그런 데 기초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TF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옥 위원** TF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현장을 가셔서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TF를 발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 아마 우리 국토위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장관께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잘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천준호 위원** 국토부 공무원을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31년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자전거는 취미로 타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취미로 좋아하시고.

그런데 취임 후에 자전거 구매를 지시하셨습니까, 직원들에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국가철도공단은 친환경 교통을 위해……

○**천준호 위원** 제가 지시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해 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천준호 위원** 구매 지시하셨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비품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구매가 불가한 항목인 거 아셨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는데요.

○**천준호 위원** 역대 전임 이사장 중에 자전거 구매한 경우가 없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역대 전임 이사장은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 정도는 비품으로서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공직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구매 지시라든가 이

런 것 할 때 그것이 구매 가능한 품목에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거는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했다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그 정도 주의는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국가철도공단에 서는 그동안에 구매한 적도 없었고 또 구매가 불가하다고 직원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업체에게 자전거를 사 달라고 대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이사장님께 전달이 됐지요? 이사장님 그 자전거 타고 다니셨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관사에 비품으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제공받은 사진인데요.

이게 구매내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 자전거를 구매 신청을 하거나 영수증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업체한테 자전거를 대신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사장님에게 이 자전거를 제공했다면 이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제가 사실은 그 구체적인 구매 경위는 알지는 못했고요. 저는 분명히 직원들에게는 비품으로서 공용으로 구매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경위를 몰랐는데, 몰랐다고 하면 만약에 그 거래업체를 통해서 직원들이 이걸 사서 이사장님한테 자전거를 제공했다면 이건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구매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또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철도공단이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물품을 구매해서 이사장한테 제공하는 물품인데 구매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사 달라고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니세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것이 아니고요.

○**천준호 위원**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요, 잘 못 살핀 것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매 과정의 실수에 대한……

○**천준호 위원** 비품이니까 문제가 없다니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까? 30년 동안 국토부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그렇게 구매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의 실수가 있었고 잘 못 살폈으니 내가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매 경위를 파악을 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천준호 위원** 구매 경위 아직도 파악 못 하셨어요? 그거 작년에 받으신 것 아닙니까? 타고 다니셨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때 구매 담당했던. 다 승진했잖아요. 무리한 요구 받아 준 공무원들 승진시켜 가지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직원들이 기강이 서겠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감사도 자전거를 요구했다고 해요. 상임감사한테도 자전거 전달됐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게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천준호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 구멍에, 구멍이 하나 나니까 그러다가 댐이 터지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의 막대한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런 걸로 이사장에게 자전거 제공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철도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최고위직에 있는 이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셔야지요. 이렇게 ‘비품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까, 국회에서 물어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전후 사정을 알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별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에서 이와 관련해서 7 말 8 초에 조사도 진행했다고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직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면 저한테 제보를 다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장관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내용이 전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저희한테 온 제보에는 지금 사진으로 보여 드린 이 자전거 말고 또 다른 고가의 자전거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들어가시고요.

장관님, 천준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다 그래서 천준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하고 적절성 등에 대해서 아마 총리실에서 무슨 조치

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받은 결과하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서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지금 받으셨으니까 그 받은 결과를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슬라이드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장관님, 지난 7월 30일 자 MBC 보도인데요. 도로공사에서 경리직원이 30억 원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113회에 걸쳐서 30억 원 횡령해서 개인투자 등에 사용을 했고 현재까지 18억 원 정도 미변제 상태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도 방식을 보고 놀랐는데요. 수기로 이렇게 전표를 써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왼쪽에는 ‘에스케이가스’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자금은 그 횡령 직원의 가족들에게 이체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금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대로 국토부에서 이 상황 파악하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관리 감독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조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법률에 따라서 도공 사장이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정준호 위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도로공사 본사에서 누가 이거를 담당했던 임원인가라고 봤더니 2024년 2월 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관리본부장이 딱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에 역임을 하셨는데 의외였던 부분은 그다음에 이분이 경영부사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이 인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인사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좀 철저하게 시스템 보완을, 수기 전표로 횡령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제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대책 마련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고속철도 선로용량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부선에 비해서 호남선 고속철도 배차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평택하고 오송을 하는 용량이 일에 한 190회 정도가 가능한데 현재 179회 정도로 거의 가득 채워서 하고 있는데 호남선을 보면요 오송에서부터 광주송정까지 보면 178회 정도가 지금 캐파인데 현황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송하고 광주송정을 하는 이 부분을 증편을 해 가지고 오송에서 환승을 시키면 배차 간격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적극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송 구간이 이제 선로가 증차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오송에서 광주송정까지 배차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환승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호남선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철도노조에서도 그렇고 지금 SR과 KTX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일률적인 선로 배분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증차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SRT가 개통되기 전에는 부산역 같은 경우에,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가 부산역 도착 이후에 다시 수서역으로 돌아가는 대기 시간을 보니까 52분에서 개통 이후에는 65분 정도로 늘어나서 이런 비효율성이 증가가 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철도노조에서 제공받은 자료인데—1일당 한 23회 정도 증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급좌석 수도 하루에 한 1만 석 이상 정도가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SRT가 지금 KTX보다 운임이 조금 더 높는데 이런 부분도 비용 절감도 되면서 교통 복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께 특별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장관님께서도 호남선 고속철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호남선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는 사안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도 저번주에 입석 타고 내려갔거든요. 일단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SR과 코레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일단 1차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일과 또 당면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정준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도공 자금 횡령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부에서 자금 횡령이 이루어지는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외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도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에 산하기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만간에 있게 될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장관님, 부동산대책을 앞서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시겠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공급대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내년도 세제개편할 때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번 대책을 할 때 세제를 포함한, 그런 수요대책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종합대책입니까 아니면 공급대책만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공급대책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제혜택과 관련된 또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내용이 일부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처 협의 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실무안은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세제개편 내용은 안 들어가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처 협의를 해서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처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욱 위원 해 봐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리고 공급 확대 체계는 지금 크게 보면 3기 신도시를 어떻게 가속화하고 고도화한다든지 수도권 유희부지 발굴하는 것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쪽이 있

는데 결국 발표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주로 주안을 두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좀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유희부지도 핵심은, 과거에도 수도권 유희부지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 활용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관철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거기에 따른 의지들을 보다 강력히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그런 주요한 틀들을 이용해서 수도권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책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불용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OC 예산이 대체로 보면 다른 분야보다 불용·이월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월이 0.9조, 불용이 1.3조, 한 2조 정도 이상을 못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그런 여건들을 적극행정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불용률 50% 넘는 게 지금 보면 43개, 1조 2000억이고요. 불용률 100%, 그러니까 한 푼도 집행 못 한 게 17개인데 대체로 보면 도로·철도가 많습니다, 이게 지역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착공 소요로 보이는데 착공 소요를 무리하게 넣는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두 단계 예산을 동시에 편성 못 하도록 돼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연도 중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거는 하반기에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잘 집행되는 예산으로 이·전용을 해야 되는데 통상 했거든요. 통상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추경 하면서 1.2조를 이·전용 재원으로 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SOC 2조를 증액하면서 1.2조 원을 감액해서 재원으로 반영했는데 이런 게 추경을 할 경우에 만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경우에도 하반기 들어서, 한 9월·10월 정도 돼서는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을 정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고 합시다만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고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사업은 예산에 반영된 거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가 편성되기 위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노력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아마 경부 일반선에서 작업자 부상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으로 가서서 사고 수습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석하시지요.

아마 코레일에서, 경부선에서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도읍 위원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영빈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 공사 및 영빈관 신축 공사에서 사실상 부정 청탁과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 및 영빈관 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해당 의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위반 소지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83조의2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 제재를 즉각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해당 의혹들이 밝혀지면 해당 부분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고요.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제가 해당 부분들 계속 챙기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에 국비 468억 그리고 82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청년안심주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겠다인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안심주택이지요? 관련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 결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실센트럴파크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사고인데요.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라면서 보증금조차 못 받아서 다른 데도 못 가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심주택이 아니고 불안주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한 사업 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점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문제는 보증금 지원 내지 보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안심주택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민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토부는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서울시가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발표한 주택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울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또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정책 슬로건 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리고 어제 보도 나온 것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RT 특설의 거북선 깃발에 일장기 그려진 것, 그것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도 빈 갑으로 돼 있는 것 봤거든요, 모든 내용이 지워진 것을 봤는데. 어제 광복절 영상에서 도교역이 나온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물어보니까요 사실상 거짓으로 답변을 보낸 겁니다. ‘AI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영상 소스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 해명을 했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기강이 해이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해당 부분도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전용기 위원** AI로 보고받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래서 이것 정확히 조사해서 정확히 해명하고……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축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해 나려고 하는데 다 걸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숨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 장관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사회도 명확한 기강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고 장관님께서 지금은 그림을 세계 쥐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법에 따라서 기획단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권역별 발전 정책과 제도 기획,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기획단이 발족 초기에는 30명 규모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에는 기획총괄과, 해안권발전지원과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특정 목적의 조직 형태는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그 기능이 국토부 지역정책과로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력은 초기에 30명에서 지금은 한 7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468억이었다가 지금은 9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담 조직이 축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사실상 법이 무력화될 것 같은데요.

○정점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 특별법이 부여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령 검토, 조정·성과평가 기능 등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은 2020년 일몰을 앞두고 있었는데 다시 연장이 돼서 2030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변화된 환경과 지역 수요에 맞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국토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파견 인력, 거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지자체에서 파견된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견 인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하고 예산 상황을 보면 법 연장 취지가 완전히 몰각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이 법으로 해 가지고 남해안권을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비전도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사실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 노력은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낙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부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비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남해안만 할 거냐? 동·서해안은 어떻게 하고 내륙권은 어

떻게 할 거냐?’ 해서 사실상 이 법은 전 국토를 포괄하는 그런 법으로 약간 기형적인 법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실질적 성과도 없고 기획단조차 사실상 무력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전남의 문금주 의원님과 함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전담 추진 기구도 설치하고 남해안 발전지구도 지정을 하고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리고 인프라 확충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관님께서서는 통영에도 여러 번 오셨다고 말씀을 전에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해안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제가 문금주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장관님,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에 이어서 포스코도 사실은 포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현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계약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사실상 포스코도 이번 사건 이후에 참여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제 지난 84개월에서 턴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주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민홍철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언제쯤, 연내에 그러면 입찰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좀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연내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 또 하나 걱정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일반 기업에서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차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접촉을 해서 기업들의 생각과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 볼 생각입니다.

○민홍철 위원 건설경기도 어렵고 자칫값도 올랐고 아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토부가 아주, 장관님께서 동남권 제일의 국책사업을 차질 없

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광역철도 예산을 보니까 10개 노선이 모두 수도권이에요. 지역은 거의 없고요,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지역의 광역철도가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더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선도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중에서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이 문제가 지금 예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예타 제도에 대해서 전면 개편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지역의 광역철도 문제에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기재부, KDI에만 맡기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소를 좀 더 완화시켜서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에 광역철도를 건설해 봐야 건설비 30%를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야 되거든요. 부담을 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지자체가 지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 제도 자체도 지역의 광역철도 이 문제는, 뭐 이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SOC 도로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부담을 좀 줄여 주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8 대 2 정도로 한 10% 정도를 좀 더 낮춰 준단든지 또 운영비 보조를 지원해 준단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하여튼 재정 당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문제를 각별히 장관님이 과제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습득력이 아주 빠르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K-패스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결산 제안설명서에서도 보니까 주요 성과로서 이 사업을 갖다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데,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자가 300만이 넘을 정도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2차관 소관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의 기대보다도 워낙 호응이 좋으니까 예산도 전용, 예비비 편성까지 해 가지고 부족 예산을 갖다가 환급비에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 데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구를 하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BNK라는 지방은행 중에서 아주 큰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패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또 시중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참여 사업자 대상자들 지금 확대할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집해서,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꼭 참여 대상 사업자에 지방은행도,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지방은행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관심 가지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보고대회 있었지요. 참석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14일에는 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장 방안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도 참석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참석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물론 각종 앞으로 향후 사업들에, 중요 사업들에 대한 주무부처는 별도

로 있지만 보니까 대부분 국토부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럴 준비 되어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저는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공공 공사 지연 방지하겠다고 그리고 신속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첨단국가산단 15개 있잖아요. 그게 물론 전 정부에서 2023년도 4월 달에 발표가 됐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K-첨단방산이잖아요. 오늘도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침없는 K-방산’ 해 가지고 빅4 수주 잔고 100조에 육박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각 언론사에서 다 게재를 했던데 지금 이런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산업, K-방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 창원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 K-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전혀,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났지만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 이것도 잘 챙기서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장관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용갑 위원 저희들이 도시철도차량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오래됐지요, 202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원시스라고 아세요, 주식회사 다원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거기가 이제 차량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서울시에서 전동차 4개 사업을 시작해요. 1호선 5호선 4호선 8호선 이렇게 4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가 948칸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특히 5호선과 8호선 같은 경우는 선금금을 지급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선금을 지급했지요.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588억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지급했는데 그 588억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미제출됐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

구 대전, 계속 노후차량을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데 차량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 실적이 없습니다. 보면 겨우 4호선에 948칸 중에서 90칸 정도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이것 장관님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588억이라는 선금을 받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 쓴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얻다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뭐에 썼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선금도 주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거의 10%도 안 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용갑 위원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일단 이유는 자기들의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진행 내용으로 볼 때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국토부에서 이것은 철저히, 지출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흔히 이렇게 보면 또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사업을 해서 불용 처리되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실행 정도가 50% 미만인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때는 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지금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늘 모든 정책들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은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험 보증료 사업이 있었지요. 이것 보니까 173억 6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51억 2200만 원이 사실 불용됐고요. 이것을 또 지자체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122억 4600만 원인데 51억 2200만 원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122억 46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47억밖에 안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 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니까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왜 이게 불용이 됐는지 이런 원인 분석부터 좀 더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홍보도 부족하고요 또 절차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그런 것도 간소화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니까 HUG에서 신청을 하면 HUG가 지자체로 바로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제도개선을 꼭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김도읍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가덕신공항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의지는 있는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로드맵을 조속하게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활주로 재배치 등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서는 거예요. 즉 정부가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여당 의원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이러면 하세월이거든요. 이런 혼선을 빚는 것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설명 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셔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민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84개월 공사기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뭐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일정한 업무계획서가,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간 문제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도 있어 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현재 장관 취임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뭐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현대에서 원래 84개월로 해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108개월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가져온 현대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무엇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산 복합산단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조속하게 GB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처리기한이 전용 부분은 최장 90일, 공용 부분은 최장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실제 처리기한은 법정처리기한을 훨씬 넘겨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공용 부분은 318일, 전용 부분은 437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작년 국감 때 부영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했구요. 그러한 악덕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을 망라하고 통상 보면 어느 정권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급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안타깝지만 인사청문회 때 전주의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우진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김윤덕 장관님 제가 그때도 경계의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님 계시는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건설사가 급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지역주택사업을 주로 하던 서희건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 조사를 착수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은혜 위원 오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8월 말, 9월 초에는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그 공급 대책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 공급 대책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얼마…… 호수를 물어보시나요?

○김은혜 위원 서울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발표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럼요.

○김은혜 위원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16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지을 곳은 없고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서울에는 아파트 지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재건축도 포함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민간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용적률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번 공급 대책에 그것 또한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최근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을 낮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고충일 것입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재건축의 인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또 누군가의 가장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지시했던 대통령, 이 지시가 내려진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건설면허 취소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통령께서 면허 취소를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좀……

○**김은혜 위원** 법적인 한도 내에서 공공입찰 제외까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저희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 사고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일단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저는 고용노동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률이 정한 내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법 사항을 행정명령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장관님 답변을 보면 대통령 지시가 실질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정치적 चेस्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서 건설사업장 몇 개가 지금 공사가 중지된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기보다는 현재 포스코 차원에서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서는 장관님과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쭙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포스코이앤씨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건설사가 일곱 군데나 됩니다. 장관님, 이 건설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현행법 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에게 그런 조치를 제안해 온다면 저는 그 조치를 국토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김은혜 위원** 면허 취소를 포함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것은 법률이 정한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대통령님 지시대로 하면 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지요. 산재를 막아야 하는 이유지요. 그러나 처벌이 능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주 처벌한다면 통째할지 모르지만 요즘 건설업체 오너가 사장 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게 다 고용 사장들입니다. 또 임직원 6000명 정도면, 도급·과건·일용직 용역 다 합치면 1만 7000명, 가족까지 하면 6만 명 가까운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근로자의 권익, 국토교통부, 건설과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런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진 이 건설업계에 대한, 다단계 구조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셔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말 한마디로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가 꺼졌나요? 켜 주고 계시나요?

○**위원장 맹성규** 1분 더 드리세요.

○**김은혜 위원** 고맙습니다. 1분만……

○**위원장 맹성규** 예.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사망할 때마다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면 그 뒤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만 징벌적 제재에만 집중하면 보는 사람은 통째합니다. 그런데 하청 협력사 근로자, 힘없는 사람까지 생계 끊어지는 것은 어떻게 막으실 생각입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건설현장 환경입니다. 최저가 입찰도 있고요, 공기 단축 압박도 있고요. 따라서 산업재해를 차단하고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한 국책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제가 그것은 다음 질의에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경부선 철도 사고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제2차관으로 하여금 사고현장 수습을 지원하도록 자리 이석을 허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간사 간 협의됐으면……

○**위원장 맹성규**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청도에서 철도 점검을 하시다가 두 분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또 잃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원인을 빨리 규명해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오늘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9조 원이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2025년 7월 기준으로 한 9조 원 규모로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요. 주거정책 지원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 수요 지원을 위한 정책대출을 급격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 확대 등이 전세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2022년도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을 다시 끌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주택정책 금융이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소득 한 6000만 원 정도인 중장년층에 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분들은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과도한 정책대출이 실제 집값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일정한 자극이 되었다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걱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 검토를 하겠고요. 주택도시기금이 실제 주거 복지, 주거 안정에 쓰인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수요자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금이 조금은 이렇게 공급자 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기금운용 개편 방안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실현에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한 90%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실화 비율이 69%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영률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그 혜택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20년도 대비 2024년도 반영률은 3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6~7% 하락했는데 15억 이상 고가 주택은 10% 정도 넘게 하락했습니다.

개략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2020년도는 1조 5000억, 2021년도에는 4조

4000억 그다음에 강남 등 25대 아파트 20억 원대 보유세 실효세율이 0.3% 이상에서 0.2%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자체가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도 또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라든가 부촌 이런 데는 그런 상황도 살피고 또 현재 결국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국민의 세금만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하시겠어요?

○윤종오 위원 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1분 더 드리세요.

○윤종오 위원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후퇴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원래 윤석열 정권에 있을 때 공언했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으니,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민자철도 주식회사신분당선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아시겠지만 강남-정자 구간입니다. 여기 사업자인데요.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이 노선을 설계·건설한 이후에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하고 30년간 무상으로 운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을 징수해서 운영비나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불확실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에 실제 운임 수입이, 정부와 함께 약정된 예상 운임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못 미칠 때는 사업 시행 1~5년간은 80% 미만일 경우 또 6~10년간은 70%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가 MRG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일 때는 사업자가 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허들 조항을 만들어 놔서 50% 미만이면 MRG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제는 신분당선 평균 수입률이 31.7%밖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50%에 미치지 못해서 MRG 운임수입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신분당선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지요. 그 주장의

핵심을 보면 원래 신분당선과 함께 연결 철도망이 건설되기로 했다고 하면서, 2005년에 약정을 했는데요. 이때 예상 교통 수요를 어떻게 전제를 했냐면 성남-여주선이 2012년 그리고 정자-광교 구간이 2013년 또 용산-강남 구간이 2016년 이렇게 쭉 같이 개통돼서 이게 연결되도록 한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노선들이 4년, 3년, 6년씩 더 지연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정부와 2005년에 약정했을 그 당시 전제가 다 틀려 버린 거지요. 그래서 신분당선은 이런 것이 제때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률이 50%를 넘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신분당선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패소를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2014년분 그때 1차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를 해서 366억을 배상을 했고요 또 2015년분이 191억입니다. 이것도 배상 판결을 받고 정부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심에 항고를 하지 않았습시다. 인정을 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현재 3차·4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MRG 관련해서 2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55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 줘야 될 판입니다.

여기 배상금은 다 냈나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직 다 냈는지는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담당하시는 분, 다 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1심 판결 받고 저희가 일단 공탁을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미항고하고 그다음에 배상금을 다 냈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공탁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558억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죽 보면 결국은 정부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생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주무관청에서도 이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엄청난 세금을 쓰는 이런 여지를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대책이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핵심은 연계된 철도가 제때 완성되지 못한 측면이 실제……

○김정재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철도가 완성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 끼친 피해 이런 것은 이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이것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무상 수송 운임 청구소송도 지금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이따가 3분 때에 간단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김희정 위원** 산하기관 기관장들에게도 다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오늘 뒤에 배석은 해 있으신데 국회에는 보고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아직 업무보고는 못 받으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현안 문제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산하기관 보고는 9월 중에 받을 생각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하실 때도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없이 실국장들에게만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사안을. 왜냐하면 결국은 산하기관이라는 게 부처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업무, 특히 오늘 다루는 결산 업무뿐만 아니라 실행을 다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 상황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안도 중요하지만 사실 밤을 새서라도 업무보고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뒤에 다 배석시킨 것으로 봐서 저는 당연히 산하기관장 업무보고 받으시고 결산 업무까지 다 숙지하셔서 나온 것으로 봤는데 모시는 실국장님들, 기조실에서 지금 장관님 일정 세팅 제대로 안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산하기관 보고는 앞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다만 산하기관……

○**김희정 위원** 아니, 당연히 언젠가는 받을 텐데 통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인사청문회 할 때도 사실은 실국장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장들 업무보고 다 받으신 다음에 숙지하셔서 정책 답변하셨어야 되고요. 당연히 국회에도 오늘 국토교통부 직원들만 같이 온 게 아니라 장관님 뒷자리에는 산하기관장들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표해서 앞자리에 계신데 업무보고 안 받고 나오셨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진짜 밤을 새서라도 빨리 업무 숙지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마포 전동스쿠터 배터리 폭발 사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산하기관 중에서 어디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 이외에 어떤 부처, 다른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는데요.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뭐냐 하면 이게 마포 전동스쿠터 배터리 사고를 통해서 모자가 사망을 한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업무보고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현안 위주로 보고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안이 아니던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김희정 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이것은 현안이 아니었습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이 현안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정확하게 제 불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 아침에 출근하시면 부처와 관련된, 전날 밤이랑 아침에 부처와 관련된 사건 사고 점검하시는 게 현안이고요. 사람이 죽어 나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랑은 두 가지 면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PM,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배터리 관련된 사고 우리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 층 이상에 설치돼야 되는 여러 가지 화재 관련된 안전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하우스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 다 우리 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이 있는데 이거를 다루어야 되는 산하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이 배터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어느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니 제가 참 질의를 드리기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업무 파악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질문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사건 사고 생기면 즉시, 내가 잘 파악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소관하는 어느 부처 어느 실·국의 어느 기관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겠구나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PM 관련해서—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입니다—개인형 이동수단 관련돼서 는 배터리 사고인데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사장님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산자부와 또 논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김희정 위원 산자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탈것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전동기 배터리 관련된 사고에서 지난번 답에 이거 이동형을 어떻게 앞으로 전기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국토부의 연구 과제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관리법에 어떻게 넣어서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서면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시간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무부처가 배터리의 경우는 산자부이지만 탈것은 우리 부처이기 때문에 이 사

건 사고 이후에 배터리 문제와 탈것의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두 부처가 향후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모르시지만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역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엄태영 위원 오늘 오전에 경부선 철로에서 안전사고가 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보니까 작업자 7명이 치였는데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이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원인 규명 철저히 하시고 이런 안전사고가 자주 재발하는데 안전 대책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사고현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좀 이런 사고가, 철로 사고는 대다수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장관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장관님 아직 자세히 보고는 못 받으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 본 위원이 2023년 1월부터 국토위에 와서 줄곧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제인 정부 때 당시 도지사와 국토부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천역 패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산자위에서 국토위로 온, 옮긴 이유도 그중의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가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호남·충청·강원도를 연결하는, 강호축이라고 이름을 당시 도지사가 지었는데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축이고 경부선과 함께 국토의 X 자 축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국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요충지인 또 충북선 교통의 중점이자 또 시발역인 제천역을 제외시키는 아주 심각한 흠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재부 예타 면제 과정에서도 충북도와 국토부는 제천역 경유안을 일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검토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역은 충북선 또 태백선·중앙선 3개 노선의 교차역이고 또 핵심 거점역이고 국내 최대 물류 운송량을 담당하는 그런 요충

지입니다. 또 동양 최대 규모의 제천조차장이 있고 또 차량정비사업소 또 코레일 충북본부에 있는 그런 철도교통의 아주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X 자 축을 건설할 때 원주, 제천을 거쳐서 영월, 태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태백-영동선을 만들 경우에 당연히 환승역이 돼야 되고 교차역이 돼야 되는 데가 제천역입니다. 그런데 호남과 강원을 연결한다면서 충주에서 바로 원주로 이어지는 이런 노선을 선정한 것은 정말로 정책 담당자라면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떤 의도인지 이런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이루고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아무튼 편의성·접근성·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까지 노선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 2차 추경 당시에도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도.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국가교통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시되 국가균형발전 차원 또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이런 데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이 경유안에 대해서, 제천역 경유안과 강호축의 재설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리고 현재 제천역에 KTX-이음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차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다만 봉양 연결선은 당초 원래 계획한 대로 일단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칙으로 하되 제천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태영 위원 아니, 제천역을…… 시간 끝났나요? 잠시……

제천역 패싱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차 철도계획에도 원주, 제천을 통해서 태백 그리고 삼척으로 가는 그 노선까지 저희가 염두에 둔다면 백년대계를 앞두고 제천역을 환승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외국인은 노른자 땅을, 국민에게는 대출 절벽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라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바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또 실거주의 의무, 사전 허가제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에 발맞춰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송기현 위원** GTX-A 노선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초보다, 당초는 2021년도에 삼성역이 개통할 계획이었는데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2024년도 12월에야 전체적으로 개통이 가능해졌거든요, 통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2021년도에 개통 계획이었던 것이 2024년으로 늘어지면서 생긴 손해보전을 위해서 16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애초에 약정한 계획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1185억 정도가 돼요. 이게 애초에 삼성역을 계획할 때 처음에 서울시가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더 소요가 되고 이렇게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늘어난 총사업비에 대한 보전 가지고 기재부하고 서울시가 협의한 것이 1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더 걸리면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게 되는 예산도 나가게 되고 실제로 예상되는 것보다, 실제로 산출되는 것보다 적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분쟁도 가능성이 있게 됐고 이런 문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이게 애초부터 계획하면서 이런 것이 예산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난번 생긴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이 잘 예측이 안 되면서 계획했다가 계약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1년도에 개통한다고 그랬었는데 늦어지니까 GTX-A노선뿐만 아니라 GTX-B·C·D까지, 다 약속은 했지만 ‘그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B노선만 해도 이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애초에 계약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공사금액이 많아지게 되니까 컨소시엄에 들어갔던 업체가 거기서 탈퇴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GTX 사업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가능한 여러 가지의 소요 시간과 절차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론 100%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초에 설계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다음에 거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애초부터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약해야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걸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애초에 선거 때 가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측을 잘해서 신뢰성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삼성역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그 컨소시엄 B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또 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협약하고 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그 문제도 심각하게 있어서 현재 재정 당국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정확하게 개선이 되어서 제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송기현 위원** 첫째는 애초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낭비나 손해를 안 입히도록 할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부처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성 있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손실보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민자사업 할 때는 재원조달 문제까지도 좀 사전에 철저히 할 필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 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GTX같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조달 문제까지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명되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입고 있는 조끼,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이런 국가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지난 7월에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방TF 유니폼입니다. 산재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이 일어나면 입고 달려 나가기 위해서 제 차에 걸어 뒀는데 가끔씩 이 옷을 안 입었으면 하는 게 제 심정이고 또 국민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 사망사고는 사회적 타살,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이룰테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검토하거나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고 주문도 하셨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또 작업자 사고가 생겨 갖고 코레일 사장님이 이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2차관도 지금 가 있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도 다 갈 생각입니다.

○염태영 위원 두 분이 사망하셨고 네 분이 중상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중에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812명 중에 건설업이 356명, 거의 전체의 43%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의 산업재해, 특히 건설현장의 이런 사망사고라든지 사고의 유형 이런 것들을 요청했더니 국토부는 이런 일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망에 있는 사망사고 현황자료로 또 이렇게 보면 사망자가 244명이라는 통계자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이것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관리하는 것 이것은 전체를 한다고 치지만 가장 많은 이런 산업현장의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느 현장에서 어느 공정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근로자가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나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한번 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이 법에……

지금 슬라이드 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 법에서 영업정지 기준을 보면 이룰테면 시공 자격 위반이나 하도급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사망이나 인명피해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그리고 또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할 때 1년을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또 일반 공중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끼쳐야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중대한 손괴가 없는 근로자 한두 명 사망은 아무 처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 대통령과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터에서 죽는 일은 없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이해했다면 도저히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또 그 법의 83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시공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 ‘구조상 중대 손괴를 일으켜서’입니다. 그럴 때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또 근로자가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또 82조 1항에 보면 고용부장관이 다른 법, 곧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들을 얘기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해당되니까 그것도 고작 2~5개월입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법령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히 법을 개정하는 건 하겠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소관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태영 위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건설현장과 국토부 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정비를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위원 시간 없지만 그냥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코레일과 5개 자회사 재해자 수를 합하면 767명인데 사고·재해로 602명이 재해가 있었고 사망자가 24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기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많은 재해와 사망이 발생하는 현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부터 산재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지휘해 주시기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현재 민간기업의 재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엇그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발주청, 우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국회 끝나면 바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온 힘을 집중해서 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서 미비점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윤진환 철도국장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장관님, 제가 국장께 두 가지 현안 관련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국장님, 대구-광주,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지금 기재부하고 예타 면제 협의를 시작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지금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영진 위원 장관님 취임하시고 기재부에 협의 요청하셨습니까, 빨리 협의하자고?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이미 예타 면제 신청은 작년 9월부터 했었고요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진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최대한 빠르게 좀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서 경산까지 가는 광역철도 대경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권영진 위원 언제 개통됐지요, 이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그게 작년 10월……

○권영진 위원 작년 12월 달에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몇 편성인 것은…… 지금 여덟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대기 한 편성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예비차량이 없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매뉴얼상으로 예비차량이 몇 편성이 준비가, 예비차량이 돼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통……

○권영진 위원 실제로 정상 안전 운영을 위해서는 세 편성이 예비차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대 고장 등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 한 편성, 중정비에 대비해서 한 편성, 비상대기 한 편성인데, 지금 대경선은 예비차량이 몇 편성이 돼 있지요? 비상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장 중대사고가 있거나 2027년도 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차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올 3월 달에 예비차량 부족 통보를 대구시에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가 국토부에 예비차량 구매 총사업비 조정 건의를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를 그동안 했었는데요. 기재부는……

○권영진 위원 지금 국토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 개통이 사실상 임시 개통인데 개통이 완료된 사업에 차량 구매는 지자체 부담이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똑같이 기재부도 개통이 완료되어서 총사업비 조정이 곤란하다, 이것 합리적인 얘기

입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윤진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원래 맨 처음에 개통할 때 정부가 70%를 보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와 유사한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게 국가 주도 사업이고 작년도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뉴얼상으로 이미 개통될 때부터 예비차량, 이게 지금 기준도 제도도 좀 바꿀 필요는 있는데 예비차량이 3편성이 돼야 되는 걸 한 편성으로 해 놓고 3월 달 들어서 코레일을 시켜서 코레일은 예비차량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와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개통이 완료되어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두 가지 문제, 장관님께서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현재 달빛철도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대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보고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동등급과 관련해서 지금……

PPT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동등급 분류는 국토부의 매뉴얼상으로 보면 긴급등급 그다음에 우선 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긴급등급은 즉시 복구하게 돼 있는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요. 우선등급은 3개월 이내에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 이후의 미복구 등급 현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지금 2025년도만 보더라도 긴급등급이 54.5%가 미복구입니다. 우선등급은 39.4%예요. 왜…… 장관님, 이게 좀 난센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체가 지자체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조사할 때 지원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권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수의 지하시설물들이 엉켜 있는데 이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대로 안전을 위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하려면 국토부가 프로세스 기준이나 협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그냥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해서 지자체에 통보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 됩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께서 꼭 챙겨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법적인 제재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논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철도사고로 다치시거나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조속한 회복을 빌면서, 왜 이렇게 후진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심정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장관님 재직 중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기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을 텐데 결국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참으로 참담한 느낌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건설현장에서의 이 산재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 줄이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직접…… 사실상 정부 발주나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원인 규명까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없어졌다고 하는 제일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입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며칠 지난 7월 말에도 익산에서도 한번 사고가 났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신호수분께서 트럭과 열차가 부딪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제제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김윤덕 장관 시대 때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장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 몇 가지 말씀 중에서 혹시 주택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워낙 정신이 없으셨던 때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 제가 놀랐던 것이, 우리가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자를 윤석열 정부 때 2025년 올해 대상으로 19개 또 내년도 대상으로 19개를 선정을 해 났어요. 선정까지 해 났는데 실제 집행계획을 보면 계획액은 올해 불과 한 4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면 매년 1

조 이상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되는 출자 형태로 투입되는 것인데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선사업자는 선정해 놓고 예산은 안 세워 놓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는 거지요.

이 사업자들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땅 구입을 위한 브릿지론까지 이미 일으켜서 그 이자를 내고 있는 판인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이쪽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주택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이런 방편 중의 매우 유력한 하나일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리고 액수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요. 전세사기 피해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혹은 지난 장관 시절에 실제 얼마나 국토부에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복기왕 위원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안 만나고 있다라는 원망 서린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 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은 피해자들도 만나고 여러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는 비용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것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 2억 6000만 원이 불용돼 있어요.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위촉하는 피해지원위원회 위원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덕 장관님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점심 식사 때 그 피해자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도 꼭 만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국토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피해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산들 제대로 다 써라라고 독촉하는 등의 이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제가 질문거리가 많은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분의 위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김종양 위원님하고 박용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갑 위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종양 위원님은요?

○김종양 위원 아니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열한 분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 이번 청도 구간에서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하신 분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사, 현재 조사 중이니 기사만 보더라도 도저히 이게 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남성현에서 청도 구간 간 직선 철로 구간에서 작업 중에 무궁화호 열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이런 선로 작업을 할 때는 열차가 접근하게 되면 미리 경보 체계나 혹은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회의가 끝나면 장관께서 직접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장관께서 좀 책임을 가지고 이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구로역에서도 선로에서 작업하다가 인명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족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상 조사를 해 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사는 역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장관께서 직접 이 사안들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른 과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외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2000만 시대를 돌파한다 그런 보고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이연희 위원 특히 거기의 면세점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잘 갖춰진 면세점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면세점의 임대료가 매우 높아서 지금 인천공항공사하고 입점업체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 신청을 한 상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면세점은 단순히 쇼핑 공간일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접하는 인상, 이미지, K-컬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면세점 운영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면세점 입장에서는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임대료가 매우 높은데 수익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거고, 공사 측 입장에서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고 그런 애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항공사 측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라.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장께서 그 입점업체에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제안했다기보다는 임대료가 높아서 그걸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 공기업,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손해를 끼쳐드릴 수도 있고 그건 또 배임의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소송으로 가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희 위원 그 소송을 하라고 입점업체들한테 사장님께서 제의를 하셨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래서 그쪽에서 방법이 없으면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방법을 받았고 또 상식적으로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실무자 간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이연희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사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소송을 입점업체한테 해라라는 부분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 제안이 아니고요. 제안이 아니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위원님 생각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연희 위원 아니,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해결 방법이 난망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까지 동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정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사장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의지신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든지,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대로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장관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 오늘 있었던 무궁화호 사고에 대해서, 심정지로 발견되신 분도 계시고 부상자분도 계신데 쾌유를 바라고요. 우선 이 문제부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이 미리 또 질의를 주셨기도 했는데 달빛철도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때 그 파업……

○정준호 위원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국토부가 직접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화물연대 신고를 독려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판까지 넘어갔고요.

재판 결과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정준호 위원 PPT에 지금 나와 있듯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헌 소지 있다고 하는 결론……

○정준호 위원 결국에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6월 5일 날 선고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여기 박스에 나와 있던 것처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무죄판결 이후에도 존치가 돼 있었고, 다만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어제 바로 해당 항목을 삭제한 걸로 저희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기에 이거 화물연대를 불법파업 하는 단체로 간주를 하고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심각하게, 무죄판결 난 사안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던 윤석열 정부, 특히 원희룡 장관 시절의 노조 때리기의 잔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어제 삭제를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이런 항목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과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화물연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이후에 신고 건수 혹시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건수는 한 마흔몇 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준호 위원 그런가요? 2022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8건 일단 초기에 신고가 됐었고, 2025년 올해 상반기 신고 접수 건수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게 한 44건 됩니다.

○정준호 위원 0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그 44건 중에서 실제 그 내용은 집단거부 행동과 관련된 건 없었고 전체……

○정준호 위원 저도 그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보시고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이 문제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단순 실수라고 보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구요. 이걸 단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장관님,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동결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2015년에 한 번 4.7% 인상한 다음에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담은 도로공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국민 세금으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부채도 보면 2010년 전에 27조였던 게 지금 한 배 반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현상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는데요. 정부에서 통행료 미인상분을 국가 세금으로 지금 민자고속도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한 200억 정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해 보니까 1300억 넘게 났어요. 이게 사실은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협약에 정

해져 있습니다만 협상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 판단 사항인데 지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따박따박 민간사업자한테 갖다 바치는 모양이 돼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통행료를 동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원가보상률이 한 80% 되고, 여기 있습니다만 주요국 대비해서 저희가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하고 또 민자사업자에 대한 보조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지금쯤이면 그렇게 모른 채하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전기료에 비해서 사실은 이슈화가 될되는데 이게 SOC 확장이나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저소득청년 임차인한테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PPT 화면 보시면 실집행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사업 규모를 실제 수요에 맞게 줄여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건지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전체 3억 원 이하 전세 거래가 79.8만이고 그중에 반환보증보험 가입한 게 26.8만, 한 33% 되는데 그 26.8만 중에 보증료 지원한 것은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11%밖에 안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홍보를 강화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홍보 강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단순 보증 가입 건수 26.8만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지원 건수 3.1만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장관님, PSO 보상제도 알고 계시지요? 공공운임 보전제도 말이지요. 이게 작년 예산도 보면 총액 한 3612억, 올해도 한 36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상받는 기관은, 지원해 준 기관은 코레일밖에 없어요. 코레일밖에 없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코레일이 공공운임 감면액의 87%, 수도권 전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도권의 전철에 대해서는 PSO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도 각 대도시마다 또 중소도시에도 전철, 도시철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감면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노인 이런 어떤 감면제도도 있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왜 PSO 보전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논리가 그래요. 일반 철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나 도시철도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자체, 특정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PSO 전체 지원액의 87%가 수도권이고 수도권 전철이라는 말이지요. 전철을 타는 사람들이나 일반 KTX를 타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 논리는 안 맞다. 이 논리를 국토부에서 깨서 이것을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지방재정이 편찮은 대도시는 그래도 해 줍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사는 곳마다 혜택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기재부의 논리를 깨서 국토부가 이것을 좀 실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오늘 참 청도 철도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부전-마산선 현재 대피갱 공사 때문에 지금 아마, 2차관이 안 계시는데 2차관이 아마 얼마 전에 갔다 오셨을 겁니다, 현장을.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토부와 사업체 그다음에 기술심사위원회가 각 견해가 달라요. 지금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큼니다. 물론 시공사도 손해가 크지요, 4년 동안 개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 줘야 돼요. 물론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것 그 지반 자체가 그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그 지역 지반 자체가 너무나 지금 연약하고 또 싱크홀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대피갱으로 할지 아니면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으로 할지 국토부에서 발주자가 결론을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개통을 해서 동남권에 부전-마산선을 개통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결론을 내 주지 않으면 개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 봐도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피난갱 설치 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또 업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이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개통한다고 했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SK가 국토부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 9000억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정부도 그 소송에 그냥 던져 놓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놔두면 하세월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담당하는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는 속칭 미루어 조지는 것으로 아마 일관하고 있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장관님, 소송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치적 결단을 하세요. 내년 6월에 개통한다면서요. 꼭 살펴봐 주시고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오늘 코레일 청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민주당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후진적 사고가 많이 자주 발생하나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선로에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 코레일 사장이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미 점심…… 드셔야지요. 그렇지만 실무자들로부터 즉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라는 최소한의 보고는 받아야지요. 철도 사망사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코레일 사장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없지요?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잣다고 면허 취소까지 운운하는 바람에 포스코이앤씨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라서 처벌을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알지만 지금 장관님께 여쭙보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처벌을? 왜 처벌한 전례가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따져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코레일은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에 준하는 코레일 폐쇄입니다, 지금. 맞잖아요. 왜 정부에서는 지금 입장이 없지요? 용산에 서는 왜 입장이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회의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제가 사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김도읍 위원**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면허 취소 운운하면서 딸린 식구들이 불안에 떨게…… 그것 좋아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지금 잇을 만하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왜 용산에서는 아직 말이 없지요? 진상 파악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 강구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장관님, 이재명 정부 지역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를 보면 GTX-B 노선,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GTX……

○김은혜 위원 B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이 사업 주관사가 어딘지 아시지요? 포스코이앤씨입니다. 장관님께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공사하는 회사 또한 포스코이앤씨인데요. 특히 호남고속철은 함께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여당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착공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금지나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을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좀 더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까 법률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그 면허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그러면 공공입찰 금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영업정지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공공……

○김은혜 위원 장관님, 저는 국책사업 공사에 대한 차질 여부까지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공사 기한, 비용 얼마나 늘어날지 분석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이달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에 강행 통과된다면 주택 공급 현장에 부작용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과 연계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김은혜 위원 부작용 파악을 지시하신 바는 없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아시다시피 건설공정은 원청과 하청이 촘촘히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하거나 쟁의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전국 건설현장의 섯다운이 우려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공기가 연장되면 모든 호가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바가 없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주택 문제 또 공사 여러 가지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검토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다만 어쨌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법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좀 질서 있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은혜 위원** 장관님, 어떤 법이든 어떤 제도이든 모두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노동자도 그동안 과도하게 원청 업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원청 업체에서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당했던 불이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더라도 장관님이 반드시 이것은 사전에 검토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에 피해가 되는지는 그동안 장관이 아니시더라도 목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따라서 장관님께서 저한테 이때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전국의 부동산 공급 현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시고요.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다음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장관님, 아까 전에 운임수입보조금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어서 무상, 무료 탑승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이 또 제기 중인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신분당선은 현재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서 무료 탑승으로 인한 손실배상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노인 등에 대해서 무료 탑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무료 탑승에 대해서 재협의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재협의를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노인 운임에 대해서 유료화 사례가 없다, 그리고 또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신분당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양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6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양자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2021년에 신분당선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337억 배상 1심 판결이 또 내려졌습니다. 또 세금이 들어갈 판이지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민간철도사업자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면요 11개의 소송이 제기 중이고요. 판결이 5개 나왔는데 모두 정부가 다 패소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476억 예산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소송이 발생되는데 국민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것 좀 준비해서요 직접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번 산재, 오늘 코레일 사고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전례 없는 강한 질타를 했는데요. 7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그다음에 공공입찰 금지, 건설면허 취소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만 여쭙볼게요. 포스코이앤씨가 지금 사망, 건설업체 중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몇 위로 알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몇 위로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순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정재 위원 10위 박입니다. 그러면 1위에서 9위 안에 들어간 회사들 다 한번씩 살펴 봐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한 달 동안 모든 공사 중단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이앤씨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입주자들 다들 불안해하고 있고요. 지금 포항에서만 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다리 건설 중단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건설이, 현재 건설 중인 사업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현장 파악을 좀 하십시오.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딱 찍어서 두들기는, 픽(pick)해서 때리는 이유를 모든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도 해야 되고 제재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 기업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진노하는, 격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들이 향간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 그러면 다른 건설업체들은 어떤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레일 사장 처벌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산재사고에 대한 경고로 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이앤씨의 작업장은 강제로 중단된 게 아니고 포스코 차원에서 스스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포스코도 그런 수렁에서 벗어나서 일정하게 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재해는 채찍으로만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당근이라든가 또 제도 정비 또 법령을 바꾸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오늘 그 사고 대통령에게 직보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제가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대로 다 파악하시고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제가 바로 보고받았고요.

○**김정재 위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 산재 관련해서는, 사고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포스코이앤씨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한테는 원래 제가 직접 내려가라고 했는데요 현재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차관이 내려간 겁니다.

○**김정재 위원** 오늘 저희가 회의하는 것보다 빨리 내려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나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의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는 건 맞지만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공사 중단을 말씀드렸지만 같은 원리라고 그러면 코레일에서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의 코레일 열차들 전부 멈춰야 됩니까,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평무사하게 잘 처리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는 상임위 중이지만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 제3연륙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관련된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꼭 풀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GTX-D(Y) 노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고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서부권에 100만 명 넘는…… 저는 교통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제5차 철도망계획 이번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예타 관련해서 좀 신속히 하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5차 철도망계획에는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남쪽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철도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남쪽과 연결하는 제2공항 철도도 사실 1·2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들어갔다가 3차, 4차에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이 복지라 그러면 남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가 포함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성이나 또 균형발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장관님 K-패스 아시지요? K-패스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60회 사이를 사용하게 되면 20% 보전하고 또 연령층, 저소득층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국비는 1137억이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현재 2274억 원 정도 규모의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77%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러면 결국 교통 인프라가 잘돼 있는 데는 많이 이용을 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지방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혜택도 못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대략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인프라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K-패스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고요. 또 성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하고 또 지방에서 효과를 더 높이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디테일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이게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오히려 지방비에 환급해 주는 금액이 줄어든게, 적게 환급해야 될 정도로…… 애초부터 한 40% 이상 신청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정책이거든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돼 가지고 이 혜택이 돌아간다. 1인당 이 혜택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훨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러면 지방에는 교통 인프라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혜택까지도 차별을 받게 되는,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하는 부분도 신경쓸 뿐 아니라 지방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장관님께서도 같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세밀한 사업 계획, 정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 진보당 윤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넘쳐 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쉽게 건설업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교육이 안 돼 있거든요.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인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고요 2025년도 예산도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받은 분들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발주 부분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을 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LH 사장님도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윤종오 위원 그리고 건물 지으면 한 층의 개념이 있습니까, 한 층고의 높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원래는 있지요.

○윤종오 위원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4층이면 한 층에 몇 미터 정도가 한 층이냐, 여기에 따라서 높이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례로는 지금 대전 보문산에 타워를 세우는가 봐요. 산의 높이는 475m인데 탑은 193m짜리를 세우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과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환경단체와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원래 애초의 취지인 녹지를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종오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히 층고 문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장관님, 인사청문회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관으로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첫날 고생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태영 위원 쉽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런 사이에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얘기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라든지 제안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거의 끝나 가는데 힘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산재에 대해서, 건설현장의 산재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와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임금 체불이 결국은 중대재해 사고나 부실시공 발생 이런 것들과 관련도 돼 있고요.

지난 2021년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만 해도 다단계의 재하도급이 있었고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또 고용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임금 체불 상태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올해에도 벌써 1조 원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특수고용, 화물·택배·플랫폼 이런 특수 형태의 노동자는 체불 신고조차 불가합니다. 왜냐면 협력업체 해지를 우려해서 체불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체불 임금 규모는 공식 수치상의 2배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조달청이 하는 하도급지킴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국가철도공단도 하는 체불e제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현재 성과를 쭉 보니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1차 하도급만 확인 가능하고, 또 상생결제 시스템은 신용불량자를 배제하는데 건설노동자의 37%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적이지 못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 그리고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실효성을 봤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철도공단이 갖고 있는 체불e제로 시스템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지만 결국은 건설사 담합 구조의 핵심이 돼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상생결제 시스템 중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현재 운영에 있어서 금융 중심의 담합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것들 전체를 좀 더 확실하게 임금 체불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도록 의지를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야만 산재도 막을 수 있고 담합의 여러 구조도 꺾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가 되고요.

사실 국가철도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잘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시간 관계상 그 외에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전용기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토법안심사(13인)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안태준 염태영 이건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7)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이종욱	국민의힘(5)
	황운하	조국혁신당(1)
교통법안심사(15인)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윤종균 이연희 정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8)
	김도읍 배준영 염태영 윤재옥 정점식 김희정	국민의힘(6)
	윤종오	진보당(1)
예산결산기금심사(13인)	◎전용기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연희 정준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7)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국민의힘(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종욱 정점식	
	윤종오	진보당(1)
청원심사(10인)	복기왕 송기현 신영대 윤종균 이건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6)
	◎엄태영 김은혜 김정재 배준영	국민의힘(4)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8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엄태영 엄태영 윤재옥 윤종오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출장 위원(2인)

윤종균 이견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김정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리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7월 31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6)

이상 3건 8월 1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3)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4)

8월 5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1)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5)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8월 8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이상 2건 8월 1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8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8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56호	2025. 7. 15.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5663호	2025. 7. 22.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664호	2025. 7. 22.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683호	2025. 7. 29.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제35684호	2025. 7. 29.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690호	2025. 7. 31.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	2025. 7. 31.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 7. 28.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0호	2025. 7. 28.	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3호	2025. 7. 29.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1호	2025. 7. 31.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2025. 7. 31.	부령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2025-847호	2025. 6. 23.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8호	2025. 6. 25.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58호	2025. 6. 25.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73호	2025. 6. 27.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98호	2025. 7. 3.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95호	2025. 7. 3.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제처공고 제2025-99호	2025. 8. 6.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58호	2025. 7. 28.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62호	2025. 7. 31.	입법예고